

---

# 서 평

---



## 자초한 전쟁이 아닌, 피할 수 없었던 전쟁

— 병자호란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에 대한 새로운 해석

[서평] 허태구(2019),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 소명출판, 387쪽.

우 경 섭\*

### 1. 머리말

1990년대 이후 조선후기 정치사상사 및 대외관계사 연구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1930년대 일제의 대륙 침략이라는 시대적 상황 이래 통설의 지위를 점해 온 사대주의 담론이 본격적으로 비판되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과 명·청 간 일방적 지배-종속 관계를 전제로 중원에 대한 조선왕조의 비주체성을 강조한 통설의 한계가 여러 방면에서 다시 검토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대주의의 표상으로 간주되어 온 중화(中華) 사상을 당대적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려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일국사의 한계를 넘어 동아시아사의 전망 속에서 조선의 입장을 보다 풍부하게 서술한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명나라에 대한 맹목적 사대주의가 ‘자초’한 전쟁으로 낙인찍힌 병자호란에 대한 근래의 연

---

\*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

구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병자호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출발점은 2009년 간행된 한명기의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이었다. 이 책은 17세기 전반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라는 흐름을 염두에 두고 후금·청의 침략에 대응한 조선왕조의 정치사상적 선택 및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저술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10년 간 축적된 연구 성과들에 기반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책 2편이 연이어 출간되었다. 병자호란의 주체인 청조의 입장에서 전쟁의 시종을 새롭게 서술한 구범진의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과 더불어,<sup>1)</sup>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허태구 교수(이하 저자로 약칭)의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이하 본서로 약칭)이다.

사실 병자호란에 대한 저자의 연구는 2009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된 『병자호란의 정치·군사사적 연구』(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를 통해 이미 정리된 바 있다. 이후 저자는 전쟁의 구체적 양상을 심도 있게 분석한 여러 편의 글을 연이어 발표하여 학위논문의 논지를 정치하게 보완하였다.<sup>2)</sup> 또한 호란의 원인과 결과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으로서 중화라는 키워드에 더욱 천착하여, 조선이 청과의 일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원인을 깊이 고민한 결과 본서와 같은 결실을 맺

1) 구범진,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까치글방, 2019.

2) 저자가 박사학위논문 이후 발표한 주요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丙子胡亂 江華島 함락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 — 金慶徵 패전책임론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13, 진단학회, 2011; 「昭顯世子の 瀋陽 억류와 人質 체험」, 『한국사상사학』 40, 한국사상사학회, 2012; 「仁祖代 對後金(對淸) 방어책의 추진과 한계 — 守城 전술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1, 조선시대사학회, 2012; 「崔鳴吉의 主和論과 對明義理」, 『한국사연구』 162, 한국사연구회, 2013; 「丙子胡亂 이해의 새로운 시각과 전망 — 胡亂期 斥和論의 성격과 그에 대한 맥락적 이해」, 『규장각』 47,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의 丁卯·丙子胡亂 관련 주요 연구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81, 조선시대사학회, 2017; 「丁卯·丙子胡亂 전후 主和·斥和論 관련 연구의 성과와 전망」, 『사학연구』 128, 한국사학회, 2017.

게 되었다.

요컨대, 전쟁사와 사상사의 두 분야를 아우른 본서는 병자호란 자체뿐만 아니라 이후 200여 년을 더 존속한 조선후기 사회의 중화주의적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는 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본서의 새로운 주장을 중심으로 저자의 논지를 살펴보고, 향후 계속 논의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 2. 본서의 문제의식과 구성

병자호란에 대한 그간의 통설을 살펴보면, 반정으로 집권한 인조 정권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명분론적 친명반청 정책을 고수한 결과 남한산성의 굴욕으로 상징되는 참패를 ‘자초’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인조 및 지배층이 지녔던 명에 대한 맹목적 사대주의, 명·청 간 힘의 우열을 고려하지 못한 국제 정세의 오판, 그리고 주화파와 척화파의 갈등에서 보이듯 당쟁으로 말미암은 국방 태세의 미비 등이 전쟁 발발과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본서는 조선이 이미 16세기 말부터 건주여진의 성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광해군은 물론 인조 역시 후금·청의 군사적 위협과 조선의 전력 열세를 자각하고 나름의 방어책을 구상했다고 전제함에서 기존 연구들과 출발점부터 다르다. 그리고 사전 예측과 대비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왜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을 피할 수 없었으며, 어떤 까닭으로 인해 출성 항복이라는 결말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기본적인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다.

저자는 우선 통설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 전쟁이 당대 사회와 제도의 총체적 산물이라면, 패배의 원인을 단지 지배층의 태만 혹은 지휘관의 자질 부족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점. (2) 사대

주의에 사로잡힌 지배층이 아무런 대비 없이 척화론을 내세워 굴욕을 자초했다는 통념은 사실과 다르며, 지금과 다른 당대인들의 신념과 가치체계를 간과했다는 점. (3) 전쟁의 결과 및 전후처리 과정, 특히 철병, 쇄환, 조병, 세폐 등 군사·경제적 현안이 아니라 항복의 의식 및 사대의 절차 등 의례 문제에 집중되었던 강화 협상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그리고 전쟁의 심연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방법론과 해석을 제시하였다. (1) 군사사적 관점에서 전쟁의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병자호란 패전은 정책 담당자의 오판이나 실천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야기한 결과이며, (2) 사상사의 차원에서 호란 전후 대명의리론의 추이를 상세히 관찰하여, 척화론의 선택은 명·청의 형세와 조선군의 승산을 고려한 현실적 차원이 아니라 의리론의 차원에서 제기된 당위의 문제였다는 점, (3) 강화 협상의 쟁점 및 전후처리 과정을 분석하여, 병자호란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는 당대인들의 ‘중화’ 인식 및 그와 밀접히 연관된 ‘예의 실천’이라는 창을 통해 엿볼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화’와 ‘예’라는 개념을 병자호란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설정한 본서의 구성은 그간의 연구들과 차별되는 본서만의 독창적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정리한 제1장 및 결론에 해당하는 제5장을 제외하고, 본서는 전쟁 전야 조선의 대청 방어태세를 다룬 제2장, 전쟁의 구체적 경과를 살펴본 제3장, 삼전도의 항례(降禮)를 중심으로 강화 협상의 추이와 전후처리 문제를 서술한 제4장 등 세 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의 목차 및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병자호란 연구의 성과와 한계

1. 문제의 제기
2. 연구 동향 검토
3. 책의 구성과 논점

제2장 병자호란 이전 조선의 국방 태세

1. 병력 확보와 군량 공급의 문제점
2. 조·명 군사 협력의 실상
3. 청야입보(淸野入保) 전술의 추진과 한계

제3장 병자호란 발발과 강화 협상의 추이

1. 대청체제(大清體制)의 수립과 조·청 간의 의례 논쟁
2. 청군의 군사력과 개전 초기의 전황
3. 남한산성 농성과 강화 협상의 쟁점

제4장 전후처리와 척화론의 함의

1. 삼전도 하례(降禮)의 이행과 대청(對淸) 관계의 재설정
2. 패전 책임자 처벌을 둘러싼 주화·척화론의 재격돌
3. 조선시대 중화(中華) 인식의 성격과 척화론

제5장 ‘두 개의 대명인식’과 병자호란

주로 인조반정 이후 정묘호란까지 기간을 다룬 제2장에서는 인조 정권이 후금의 군사적 위협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검토하였다. 저자는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대비되는 인조의 ‘승명반후금(淸)’ 노선이 전란을 자초했다고 설명해 온 통설을 부정하며, 전력의 열세를 자각한 인조 정권 역시 광해군 때와 마찬가지로 후금과의 군사적 대결을 가급적 회피하였음을 지적하였다.<sup>3)</sup>

또한 군비 확충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갖출 수 없었던 당시 조선의 실상에 주목한 부분은 기존 연구들에서 상세히 조명되지 못한 내용이다.

3) 이는 한명기가 『임진왜란과 한중관계』(역사비평사, 1999)의 결론에서 이미 지적한 바이다.

청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5만~10만의 정예병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 사회·경제적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임진왜란의 피해가 복구되지 못한 채 직면한 소빙기(小氷期)의 영향, 명 사신 접대와 모문룡 지원에 소요된 막대한 지출 등이 조선의 군비 증강을 가로막았던 사실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전 인구의 30~40%에 달하는 노비 제도가 초래한 양인의 부족 및 사족의 군역 회피라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주목한 서술은 청의 침공을 예측하면서도 충분한 대비를 갖추지 못했던 조선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당시 동아시아 정세를 조망하며 명군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았던 사정을 살펴본 2절의 내용 역시 주목할 만하다. 명의 혼란스러운 국내 사정과 후금의 요동 점령, 그리고 조선을 구원하려는 의지와 능력 모두 결여한 채 작폐를 일삼던 모문룡 세력 등이 조선 조정으로 하여금 명의 원병 또는 연합 작전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조선은 나름대로 산성을 거점으로 삼아 후금의 기마병에 대적하려는 청야입보(淸野入保) 전술을 채택했다. 하지만 부실한 국가 재정과 민심의 반발로 인해 성곽의 수축과 개수 그리고 군사와 군량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전쟁을 맞게 되었다. 여기에서 저자가 강조한 점은 후금이 의주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대로를 따라 직공(直攻)할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지의 산성으로 방어 거점을 옮긴 것은 전략적 실패가 아닌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저자는 2장의 내용을 통해 후금 방어를 위한 군사력 확보와 전략적 대비가 집권세력의 의지를 초월하는 훨씬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었어야 하는 사안임을 밝히고, 군비 증강의 필요성과 민생의 안정이라는 딜레마적 상황 속에서 전쟁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병자호란 직전 조선의 현실을 예리하게 분석하였다.

정묘호란 이후 남한산성의 항복까지를 다룬 제3장에서는 병자호란의 발발 과정, 청군의 전력과 전략, 남한산성의 농성과 강화 협상의 추이 등

을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우선 정묘맹약 이후 후금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병자년 2월 황제 존호 진상을 요구하는 후금 사신의 파견을 계기로 척화론이 비등하고, 같은 해 4월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식에 참여한 나덕헌과 이확의 배례(拜禮) 거부 사건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홍타이지가 친정(親征)을 결심하기까지 과정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2절에서는 병자호란에 참전한 청군의 규모와 구성, 장비 동원과 운영 방식, 개전 초기 청군 선발대의 기동 경로 등을 세밀히 검토하며, 일방적인 전력 열세 속에서 청야입보 전술과 남한산성의 농성 이외에 별다른 군사적 대안을 선택할 수 없었던 조선의 사정을 설명하였다.

3절에서는 농성 기간 중 이루어진 강화 협상의 추이와 쟁점을 초반기(병자년 12월 14일~30일), 중반기(정축년 1월 1일~15일), 종반기(정축년 1월 16일~30일) 등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입성 직후부터 화친을 염두에 두었던 인조와 대신들은 청군 진영과 국서를 왕래하며 강화 협상을 시도하였다. 저자는 이때 쟁점이 된 사안으로 황제 칭호를 사용한 청의 국서 접수, 그 다음으로 홍타이지에 대한 인조의 칭신(稱臣) 및 숭덕(崇德) 연호 사용, 그 다음으로 인조의 출성 항복 등 세 가지 문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리한 전황을 바탕으로 강화 조건의 수위를 높여가던 청의 전략과, 청의 점증하는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절박한 처지를 긴장감 있게 대비시켜 보여주었다.

저자는 이때의 강화 협상이야말로 현대인과 다른 당대인들의 심성과 지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지목하였다. 협상의 쟁점이 영토의 할양이나 전쟁 배상금 등의 사안이 아니라, 칭신과 연호 등 대청체제(大清體制)의 수용 여부를 둘러싼 의례적 문제였기 때문이다. 또한 고립무원의 절대적 열세 속에서도 대명사대를 상징하는 의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조선의 태도 역시 병자호란의 성격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라 평가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홍타이지를 황제로 인정하고 대청체제 성립을 상징하는 의례적 장치들을 받아들인 연후에야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 저자는

협상 과정에서 조선의 군신이 궁극적으로 고심했던 사안은 항복 여부 자체가 아니라 예를 통해 구현되는 항복의 형식이었고, 예의 문제에 집착한 것은 청조 역시 마찬가지였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다.

이른바 정축화약이라 불리는 강화 조건에 대한 분석, 그리고 종전 직후 불거진 척화·주화의 갈등 및 전후처리 과정을 살펴본 4장은 병자호란을 바라보는 저자의 독창적 견해가 집약적으로 서술된 부분이다.

1절에서는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로 상징되는 삼전도 항례를 통해 인조와 조정 신료들이 홍타이지의 신하가 되었음을 인정한 뒤 직면하게 된 난제들을 세세히 살피고 있다. 정축화약의 여러 조건들 가운데 조선이 가장 곤혹스럽게 여긴 일은 명의 고명(誥命)과 인신(印信)을 반납하고 청의 연호를 사용하는 등, 사대처의 교체와 대명의리의 포기를 상징하는 의례적 절차였다. 또한 군사를 동원해 명 침공에 참여하라는 조병(助兵)의 규정이야말로 대명의리의 배신을 직접적으로 의미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주화론자 최명길조차 조병만큼은 회피하기 위해 결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청의 강압을 거부할 수 없었고, 결국 1644년 명 멸망 직전까지 여러 차례 군사를 파견하여 명 침공에 동참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종전 직후 패전 책임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적 갈등을 살핀 2절에서는 전쟁을 충지휘한 인조와 대신들 및 척화론의 입장에 섰던 언관들이 상대방에게 패전의 책임을 전가하던 정황을 소개하고, 양국의 전력차가 컸던 현실 및 척화론에 기반한 공론이 인조의 외교 정책을 크게 제약했다는 점을 들어 언관들의 주장에 억지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나만갑의 기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강화도 실패를 이유로 사사된 김경징의 죽음 역시 주화·척화 갈등의 소산임을 밝히고 있다.

3절은 지금까지 살펴 본 전쟁의 구체적 사실들에 근거하여 병자호란의 역사적 성격을 규정한 총결에 해당한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조선

지식인들은 이미 국초부터 예(禮)를 핵심으로 하는 중화주의적 세계관을 내면화 하였고, 이에 따라 명에 대한 의리는 인륜의 차원에서 불변의 진리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리고 명에 대한 의리는 명분과 실리의 구도로써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조선시대 내내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가치체계이자 현실적으로 강력한 파워를 지닌 정치 담론이었다. 따라서 인조대 외교 정책의 배경에는 대명의리와 척화라는 공론(公論)의 압력이 엄중했으며, 이를 부정할 경우 초래될 체제 위기의 폭발력은 ‘배명친후금’ 외교가 초래한 광해군의 정치적 고립과 인조반정이 반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인조 정권이 전력의 열세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고 단언한다. 다만 그 이유가 임란 당시 명의 재조지은에 대한 부채 내지 보상 의식이나, 향후 명이 회복되어 보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현실론적 판단 때문은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당시 조선 지식인들에게 대명의리와 척화론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리의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척화·주화 대립의 본질은 대명의리의 부정 또는 포기 여부가 아니라 국망 직전의 극한 상황에서 독자의 영토와 백성을 가진 외복 제후국 조선이 황제국 명에 대한 의리를 어느 선까지 희생하며 지켜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둘러싼 견해 차이였다고 해석하였다.

그렇다면 의리를 지켜야 할 대상으로서 ‘명’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자는 ‘두 개의 대명인식’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대명의리와 척화론이 결코 명에 대한 맹목적 종속을 의미하지 않음을 논증하고 있다. 당시 조선 지식인들에게 명이란 현실에 존재하는 특정 국가라기보다 중화문명의 상징이자 보편적 가치를 의미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저자는 병자호란기 대명의리와 척화론의 고수가 국제 정세의 오관 또는 명이라는 특정 국가에 대한 맹목적 종속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예제와 인륜으로 집약되는 중화문명의 가치를 공유하

던 조선 지식인들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이자, 문명과 야만, 인간과 짐승의 영역을 판가름하는 실존적 결단이었다는 것이 저자가 병자호란기 척화론에 부여한 역사적 평가라 할 수 있다.

### 3. 몇 가지 쟁점들

지금까지 살펴본 본서의 내용 중 기존의 통설과 상이한 주장들에 주목해 보면, 그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1) 충분히 예견되던 청의 침공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한 까닭은 인조정권의 무능과 오판 때문이라기보다, 임란 이후 조선왕조가 처한 사회경제적 위기에서 비롯된 구조적 원인 때문이었다.

(2) 병자호란은 인조의 ‘침명반청’ 노선이 자초한 전쟁이 아니라, 청이 대청체제의 수용을 상징하는 의례를 강요하며 작심하고 일으킨 전쟁이자, 조선이 유학적 신념과 가치체계를 근본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또한 척화·주화의 갈등은 명분과 실리의 대립이 아닌, 제후국 조선이 지켜야 할 의리의 한계에 대한 이견이었다.

(3) 호란기 대명의리론과 척화론의 배경을 이룬 중화주의적 세계관은 조선초기부터 이미 폭넓게 공유되고 있었다. 이때 명이란 맹목적 종속의 대상으로서 특정 국가를 지칭하기보다, 중화문명의 계승을 상징하는 보편적 개념이었다.

지금까지 통설로 간주되어 온 ‘명분과 실리’라는 결과론적 판단에서 벗어나, 당대인들의 사상 체계에 입각하여 병자호란을 재해석한 본서의 전반적인 논지에 평자 역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맹목적 사대주의에서 비롯된 척화론이 남한산성의 굴욕을 초래했다는 이른바 ‘병자호란 자초론’을 전면적으로 비판한 부분이야말로 본서의 가장 중요한 연구사적 공로라 할 수 있다.

대다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인용되고 있는 자초론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자초론은 한국의 역사와 현실을 사대주의와 당쟁이라는 비정상적 특수성의 차원에서 비판할 때 늘 인용되는 담론이기도 하다. 일례로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란이 벌어졌을 때, 병자호란을 회상하며 일본의 도발을 자초한 한국의 과오를 지적하는 언론 기사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맹목적 반청(반일) 감정에 휘말려 국제정세를 오판한 사건’으로서 병자호란은 여전히 현실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저자가 10년 전 박사학위논문에서 이미 지적했고 최근 다른 연구자들도 자주 언급하듯이, 자초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쟁을 일으킨 주체 즉 청의 의도는 살펴되지 않은 채, 전쟁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조선 내부의 무능과 과오만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물론 전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인조와 지배층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겠지만, 그것은 전쟁의 원인 및 결과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병자호란이 왜 일어났는지 해명하기 위해서는 전쟁 주체였던 홍타이지의 의도부터 살펴봐야 함은 본서뿐 아니라 구범진의 책에도 잘 설명되어 있다.

또한 지금까지 병자호란 연구가 전쟁사 또는 대외관계사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17세기 중반의 컨텍스트 속에서 청과의 일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인들의 신념과 가치체계를 사상사적 방법론을 통해 해명한 점 또한 중요한 의의라 하겠다. 병자호란에 대한 조선의 대응 과정에서 시종일관 대명의리론과 척화론이 중심 담론으로 기능하였고, 이는 명이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중화문명의 가치가 조선의 군신 및 사대부들 사이에서 오래 전부터 강고하게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평자는 조선 사상계에 중화주의가 정착되는 시기에 관하여 저자의 주장과 견해를 달리하기에, 이번 지면을 빌어 함께 고민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

우선 인조와 조정 대신들이 전쟁에 대응한 태도 및 전후 정치세력의

재편 과정을 살펴보면, 그들이 과연 저자가 서술한 바와 같이 척화와 대명리의 가치를 일관되게 신봉하고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 병자호란이 발발하기 직전 인조는 “방어할 준비를 하고자 하나 형세가 이와 같고, 기미(羈縻)하는 방도를 쓰고자 하나 이름난 선비들이 안 된다고 한다. 적은 오고야 말텐데 어찌 해야 좋은가?”라고 한탄했다.<sup>4)</sup> 이 말은 전쟁이 일어난 뒤 척화-주화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인조의 모습을 예시(豫示)하는 상징적 장면이다.

그리고 남한산성 입성 3일 만인 12월 17일에 이미 전쟁의 책임을 언관들의 무모한 척화론 탓으로 돌리고, 종사와 백성을 보전한다는 이유를 들어 화친을 결정했다.<sup>5)</sup> 이는 척화의 당위성을 굳건히 고수하다가 전쟁의 형세가 어쩔 수 없게 되자 비로소 화친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남한산성에서 논의된 척화와 항전의 주장은 강화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에 불과했을 뿐, 도덕적 당위의 차원에서 논의된 흔적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인조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강화 협상의 과정을 통해 엿볼 수 있을 듯하다. 명백한 전력 차이로 인해 항복이 불가피함을 인정 하였을 때, 인조는 어떤 조건의 항복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까? 가장 좋기로는 정묘호란 때처럼 양국 간 위계를 형제 관계로 유지하며 두루뭉술하게 항복하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청의 일방적 공세 아래, 조선 조정은 정축년 1월 18일 대청체제의 편입을 의미하는 칭신의 국서를 발송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남은 일은 국왕의 출성 항복을 모면하는 것이었다. 저자는 청의 궁극적 개전 목표가 흥타이지의 황제 즉위를 인정 받으려는 것이었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인조의 출성 항복이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조와 대신들 역시 어떻게 해서든 출성 항복을 피하는 것으로 최종적 협상 목표를 삼았다고 설명했다.

4) 『인조실록』 권33, 인조 14년 11월 12일(임자).

5) 『승정원일기』, 인조 14년 12월 17일.

그러나 평자가 보기에 인조가 출성보다 더욱 염려했던 일은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 청으로 끌려가는 것, 이른바 북행(北行)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는 금나라에 끌려가 객사한 송나라의 휘종과 흠종의 비극적 운명, 그리고 『여사제강』(麗史提綱) 등 17세기 역사서에서 오랑캐에 복속한 필연적 결과라 강조했던 충선왕과 충혜왕의 유배 등을 통해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만약 저자의 주장대로 중화문명의 보전이 왕조 존립의 이유라고 확신했다면, 홍타이지에게 칭신한 1월 18일의 국서로 전쟁은 사실상 끝난 일이었다. 그러나 본문에서 상세히 언급하듯 조선 조정은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청과 집요한 협상을 이어나갔고, 그 결과 인조는 출성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북행을 피하고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당시 인조와 대신들에게는 대청체제의 인정을 의미하는 칭신과 출성 이후에도 지켜야 할 과제, 즉 북행의 모면과 정권 유지라는 목표가 더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삼배구고두로 마무리 된 삼전도의 항례는 인조에게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구범진의 주장대로, 홍타이지로 하여금 급작스레 철군을 결정하게 만든 천연두 덕분인지도 모르겠다.

항복 직후인 2월 19일, 인조는 현실이 이미 어쩔 수 없게 되었으니 미래를 위해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책임을 함께 나누자는 상투적인 교서를 내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하루의 치욕을 참지 못하고 융통성 없이 필부의 의리만을 지켰다면 이씨의 혈식(血食)은 여기서 끊어졌을 것이다.” 결국 조선은 명 중심의 중화질서에서 이탈하며 홍타이지에게 칭신 항복한 대가를 지불하며 국왕의 북행을 모면하고 종묘사직을 보전하는 성과를 얻어낸 셈이다.

한편, 저자는 주화론자들 역시 명에 대한 의리를 결코 부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패전 후 청에 순응적일 수밖에 없었던 인조와 대신들의 대응을 친청(親淸) 행보라 해석함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외교적 운신의 폭이 거의 없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명 침

공을 위한 병력 파견 등 종전 이후 청의 강압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다는 것이다.

주화파 또는 친청파라는 낙인이 어떤 정치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수사(修辭)였는지 당대적 맥락에서 고민할 필요성을 제기한 저자의 주장이 깊이 고민할 만하다. 종전 후 최명길이 명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나, 김경징의 죽음에 억울한 부분이 있었음을 밝힌 본문의 서술은 척화와 반청의 담론이 지닌 정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당대의 부정적 평가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주화파의 정당성을 현실론의 관점에서 미화하거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상적 설명으로 최명길 등의 탈주자학적 성향을 부각시킨 기존 연구들과 견주어 보았을 때, 저자의 견해가 당시 현실에 보다 부합하는 합리적 설명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병자호란이 참패로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척화론이 사대부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조선후기 정치·사상계의 지배적 담론으로서 생명력을 유지했음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패전 이후에 청의 압력이 가중된 시기라고 하여도 조선사회에서 친청파의 공공연한 존재를 상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저자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평자의 이전 논문에서 주장했듯이, 척화신을 적에게 넘겨주고 화친하자던 남한산성 군사들의 시위는 당시 척화와 대명여리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했던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청에 대한 정성과 신의’를 강조하며 사대의 자발성을 역설했던 인조와 김류·김자점 등의 행태를 감안하면, 종전 이후 조야에서 제기된 ‘친청’적 주장이 단지 생존을 위해 불가피했던 현실적 선택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sup>6)</sup>

이상에서 짚어본 현상들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저자의 주장처럼 병자호란 당시 척화론과 대명여리론으로 표출된 중화주의적 세계관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저자는 여말선초 성리학

6) 우경섭(2017), 「인조대 ‘親淸派’의 존재에 대한 재검토」, 『조선시대사학보』 81, 조선시대사학회.

의 수용에 주목하여 이미 왕조 개창과 더불어 중화주의적 세계관이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 폭넓게 공유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명나라가 주도하는 안정적 국제질서 속에서, 중화와 이적의 현실적 의미를 실감하기 어려웠던 조선전기에 과연 그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저자가 본서 전체를 통해 강조하듯, 중화란 하나의 가치이자 신념 체계이다. 그런데 조선시대인들의 믿음과 달리, 그것은 태생적으로 체득된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 아니라 특정한 현실 조건 아래 이론 학습을 통해 받아들여진 관념적 세계관이다. 중국에서 중화주의의 체계화가 유목민족의 침략에 시달리던 송대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도덕과 현실의 일치를 지향하는 성리학이 수용되고 이를 토대로 조선 왕조가 성립된 여말선초 시기에 중화 인식의 질적 전환이 일어났음은 분명하다. 명에 대한 사대의 이유가 형세적 강약이 아닌 도덕적 당위의 차원에서 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중반까지도 중화를 논하면서 의리와 더불어 형세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었던 사례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훗날 척화론의 화신으로 추앙되는 김상헌조차 척화·반청의 이유로서 제시했던 다음과 같은 현실론을 단순히 인조에 대한 설득의 방편이었다고만 해석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지금 계획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의를 지킬 만하지 못하다고 하니, 신 역시 예의에 의거하여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로써 논하더라도, 힘센 이웃의 한나절 강포함만을 두려워하여 천자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원대한 계책이 아닙니다. …… 산해관 아래 줄지어 주둔한 군사들과 바다 위 군함들의 병졸들이 비록 오랑캐를 쓸어내고 요동 땅을 회복하기에 부족하지만, 우리나라의 잘못을 금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호랑이 앞의 창귀(尙鬼)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 죄를 물으려는 군사가 천둥번개처럼 달려와 배를 띄운 지 하루 만에 황해도와 경기도

에 당도할 것이니, 두려움의 대상이 오직 심양에만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sup>7)</sup>

인조 말년에 이르기까지, 척화와 대명여리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현실적 효용을 함께 거론한 사람들은 적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대명사대의 도덕적 당위와 현실적 이해가 일치했던 조선전기의 사상적 여파가 아니었을까? 여말선초 성리학의 수용 직후부터 고려시대와 같은 ‘형세론적 화이론’<sup>8)</sup>이 사라지고 도덕적 당위로서 대명사대의 필연성을 설명하려 한 중화주의적 세계관이 자리 잡았다고 보기에는 ‘의리의 순수함’이라는 송시열적 기준이 아직 미흡해 보인다. 대명사대의 이념적 당위성과 현실적 효용성 두 가지가 일치했기에, 명과 조선의 관계를 부자 사이의 인륜 질서로 표현한 정치·외교적 수사만이 주로 역사책에 남겨진 것은 아니었을까?<sup>9)</sup> 조선전기 사상계에서 중화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심이 잘 드러나지 않음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듯하다.

아울러 관념적 세계관으로서 중화주의가 보편적으로 수용되기까지는 방대한 이론 학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조선전기 중화주의의 정착을 입증할 만한 사상적 노력의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과연 조선전기 지식인들이 어떤 책의 학습을 통해 대명사대의 도덕적 당위를 내면화하고, 또 그렇게 확립된 중화주의적 세계관을 보여 주는 어떤 저술을 남겼던가? 조선전기 중화주의의 핵심 교재인 『춘추』

7) 『淸陰集』 卷21, 請勿助兵瀋陽疏 — 己卯十二月 “今之謀者以爲禮義不足守, 臣未暇據禮義以辨, 雖以利害論之, 徒畏強隣一朝之暴, 而不懼天子六師之移, 非遠計也. …… 關下列屯之兵, 海上樓舡之卒, 雖不足於掃蕩復遼疆, 而其於禁我國之爲梗則有餘也. 若聞我國之人爲佞鬼於虎前, 問罪之師, 雷奔霆擊, 帆風一日, 直到海西坻島之間, 毋謂可畏者獨在於瀋陽也.”

8) ‘형세론적 화이론’이라는 개념이 과연 성립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일단 기존 연구들의 표현을 차용하고자 한다.

9) 계승범(2014), 『중종의 시대 — 조선의 유교화와 사림운동』, 역사비평사.

와 주자 저술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고민이 수행된 흔적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주자학 연구가 미진한 배경 위에서 증화 인식의 근본적 변화가 가능했을까? 평자의 생각에는, 조선 사상계에 증화 두 글자가 각인된 것은 아무래도 주자 저술 정리에 일생을 바친 송시열의 노력 이후에야 가능했던 듯하다.<sup>10)</sup>

저자는 여말선초 성리학 도입과 더불어 출현한 새로운 세계관을 ‘명분을 의식한 실리의 포기가 아니라, 명분도 의식한 실리의 추구’라는 말로 요약했다. 충분히 수긍할 만한 주장이다. 그러나 “척화론자들이 진정 우려했던 사안은 명의 문책이나 보복이 아니라, 대명의리의 포기가 의미하는 윤리와 도덕의 붕괴이자 이것이 초래할 역사의 평가와 천하의 비난이었다. 이들에게 주화·척화의 문제는 외교적 진로의 선택이 아닌 문명과 야만, 인간과 금수를 택하는 실존적 결단의 문제였다.”라고까지 말하기에는, 현실론의 비중이 여전히 작지 않았던 당시 사례들이 부담스럽다.

임란 이후 대명의리론을 상징하는 ‘재조지은’(再造之恩)이라는 표현이 조선후기 내내 생명력을 유지했던 점도 저자의 주장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저자는 주로 조선전기와 병자호란기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한명기가 제기한 재조지은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선전기의 자주적·실리적 대명 외교가 임란 이후 현실적 ‘부채의식’인 재조지은론의 제약을 받은 결과 병자호란의 패전으로 귀결되었다는 한명기의 주장을 비판하며, 병자호란에 대한 조선 조정의 대응을 결정한 보다 근원적 요소이자 재조지은론의 본질로서 국초 이래의 증화주의적 세계관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자의 이러한 견해는 주로 동아시아 정치·외교사의 흐름 속에서 조선의 대처를 조망하는 가운데 부각되었던 재조지은론의 사상적 배경을

10) 평자는 증화주의적 세계관이 조선 사상계에 정착된 시기를 송시열이 등장한 효종대 이후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조선증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유니스토리, 2013), pp. 43-103쪽 참조.

보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평자 역시 ‘기브 앤 테이크’ 차원의 현실론에 기반한 재조지은 담론이 남한산성 항복 이후 도리어 흥타이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전용(轉用)되었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sup>11)</sup> 그러나 본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드는 점은, 현실적 부채의식으로서 재조지은론이 18세기 대보단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대명의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송시열의 전형적인 중화주의 담론과 입장을 달리하는 국왕들의 어법이기는 하지만, 대명의리의 당위성을 현실적 맥락에서 확보하려는 입장이 조선후기까지도 여전히 존재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의 주요 내용 및 그 의미, 그리고 향후 함께 생각해 볼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혹여 저자의 본지를 곱해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동시에 평자의 부족한 필력으로 인해 본서에 담긴 깊은 고민과 정채로운 표현들을 범범하게 만들어 버린 잘못에 대해서도 저자와 독자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의문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전쟁 자체에 대한 치밀한 분석에 더하여, 중화라는 조선시대의 관건적 담론의 흐름 속에서 전쟁의 성격을 조망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특징이야말로 척화(명분) 대 주화(현실)의 결과론적 도식에 입각하여 패전 책임을 추궁하는 데 치중했던 기존 연구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조선 시대사 전반의 긴 흐름 속에서 병자호란의 위상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

11) 우경섭(2017), 「17-18세기 임진왜란 참전 明軍에 대한 기억」, 『한국학연구』 46,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게 만든 기반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방대한 분량의 연구 성과들을 빠짐 없이 독해하고 이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저자의 학문적 성실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듯하다.

요컨대,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으로서 중화주의의 맥락 속에서 병자호란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역사적 성격을 재평가한 본서의 탁월한 학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재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저자가 표현한 바 ‘문명과 야만, 인간과 짐승을 선택하는 실존적 고민’으로서 중화주의적 세계관이 과연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과연 얼마나 전일하고 균질적으로 관철되었는지 고민해 볼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여말선초부터 대보단에 이르기까지 중화주의 담론의 ‘깊이와 순도’가 시기적으로 어떻게 차이나는 지에 관한 통시적 문제의식, 평자에 게는 그것이 본서를 통해 제시된 보다 중요한 연구사적 과제로 다가온다. 향후 멀지 않은 장래에 병자호란이라는 작은(?) 사건을 넘어 조선시대 대외관계 및 대외인식 전반을 아우르는, 저자의 폭넓은 식견과 엄정한 통찰을 음미해 볼 또 다른 기회가 있기를 고대한다.

## 참고문헌

### 【논 저】

- 계승범(2014), 『증종의 시대 — 조선의 유교화와 사람운동』, 역사비평사.
- 구범진(2019), 『병자호란, 흥타이지의 전쟁』, 까치.
- 우경섭(2017), 「17-18세기 임진왜란 참전 明軍에 대한 기억」, 『한국학연구』 46,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 우경섭(2017), 「인조대 ‘親淸派’의 존재에 대한 재검토」, 『조선시대사학보』 81, 조선시대사학회.
- 우경섭(2013),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 한명기(2013), 『역사평설 병자호란』 1·2, 푸른역사.
- 한명기(2009),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 한명기(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 허태구(2019),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 소명출판.
- 허태구(2019), 「병자호란 연구의 새로운 定礎: 구범진(2019), 『병자호란, 흥타이지의 전쟁』, 까치, 403쪽」, 『인문논총』 76 (3), 서울대 인문학연구원.